

공무원연금 깎아 국민연금 개선하기는 사기극일 뿐이다

▶ 관련기사 2~5, 8~9 면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16 면



세월호 관련 책들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
성찰을 촉구하다

12~13 면

그리스 시리자 논쟁
사회주의자는
좌파 정부에 참여해야 하나

6~7 면

박노자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옛 소련과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14~15 면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땡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더 내고 덜 받는 것만 따져도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입는 평균 손실액은 최소 7천 2백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나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큰 개악이다.

또, 보험료 납부 기한을 3년 연장해 36년 동안 내도록 했다. 더 오랫동안 임금에서 보험료를 떼겠다는 것이다. 반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5년치 연금을 빼앗기는 데다가 퇴직 후 수년간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

유족연금도 10퍼센트 삭감하고 향후 5년간 모든 퇴직자들의 연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실질연금을 삭감하는 것인데, 말이 5년이지 그 이후 연금도 누적적으로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격은 더 크다. 이로 인해 향후 30년간 퇴직 공무원들이 감수해야 할 연금 삭감액만 약 37조 원에 이른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재정 절감 효과가 3백33조 원인데, 이는 애초 새누리당안보다도 24조 2천억 원 정도 더 많다. 2009년 개약과 비교하면 향후 30년간 4.47배나 큰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교사·공무원 노동자가 치러야 할 희생이 더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이 “반토막 연금 막아 냈다”고 자화자찬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으로 여야 합의안이 마치 ‘하후상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2016년 9급 신규 공무원의 예상 연금액은 1백34만 원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적게 깎일 뿐으로 ‘하박상박’이다.

정부 여당 측을 대변하는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두 배나 더 낸다는 점과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 기업 퇴직금의 39퍼센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사실상 같아지는 셈이라고 실토했다. 이렇게 되면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박상박

또, 연금 수급 요건도 국민연금과 같게(20년에서 10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염두에 둔 꼼수다.

인사혁신처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단기간에 큰 폭의 개혁”이라고 평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된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정부 재정 절감 효과가 3백33조 원이나 되는 사상 최대 개악이다.

했고, 당·청은 지난 15일 회동을 통해 “주어진 조건 속에 최선의 안”이라고 인정했다. 개악 당사자들이 ‘최선의 성과’라고 하는 마당에, 교총·공노총·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선방”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들은 한사코 투쟁을 회피하고 협상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1백만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후를 팔아먹는 개악안에 합의했다.

이 개악 공모자들은 여야 합의안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손실은 적정 수준으로 하면서 재정 안정화 목표도 달성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다. 정부·여당이 자랑하는 재정 절감 효과는 결국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희생의 크기다. 보험료 상승이나 연금액 감소만으로 연금 삭감 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납부 기한, 연금액 인상, 유족연금 등 여야 합

의안에는 가능한 모든 항목에 개악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필두로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개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손보려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후퇴는 공적연금 개악 도미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개악의 폭과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여야 합의안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장호중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 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런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상향하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논의는 정작 가장 중요한 논점들을 회피하는 것이다.

첫째, 누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연금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일부를 적립해 퇴직 후에 지급하는 ‘이연연금’이다. 사측이 국민연금을 비롯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지, 즉 사측이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지 여부는 노동자들이 취업할 때 따져 보는 중요한 노동조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도 그 조건 중 하나가 됐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보험료 절반 이상을 부담

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가입자들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다. 반면,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주들이 절반 이상을 내는데 이조차 1980년대 이후 연금 제도가 개악된 결과다. 1990년대 연금이 개악되기 전 스웨덴에서는 기업주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다.

노동자들의 연금을 책임져야 할 기업주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즉, 소득대체율과 노동자 보험료 사이에 필연적인 비례 관계는 없다. 이 점에서 일부 진보적 학자들이 현행 보험료 체계를 정당화시키고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다.

미래 세대 부담론

둘째, 박근혜 정부가 보험료를 두 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2013년에 계산한 재정 추계를 토대로 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것이다. 이 계산법은 2083년에 향후 17년치(2100년까지) 연금 지급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70~80년 뒤에 기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차라리 앞으로 6개월 뒤 비가 올지를 예측하는 게 확률이 높을 것이다. 출산율, 사망률, 인구이동 같은 인구학적 변수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주가, 금리, 실업률 등 매우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5년에 지금의 출산율이나 경제 규모 등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처럼 황당한 계산을 하는 까닭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적립식, 즉 내가 받을 연금을 내가 보험료로 저축하는 적립 방식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이렇게 만든 까닭은 연금이 애초 취지(이연연금)와 달리 노동자 책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런 취지로 1990년대 중반 세계 각국에 기존의 부과식 연금을 적립식으로 바꿀 것을 권했다. 부과식은 건강보험처럼 필요한 비용을 그해에 거두는 방식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방식을 강요하려고 ‘미래 세대 부담론’을 만들어 냈다. 다시 말해 지금 노동자들이 충분한 기금을 쌓아 두지 않으면 그 부담을 미래 세대들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좋다고 할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노동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것은 피할 수



기업주의 책임을 면해 주는 ‘미래 세대 부담론’ 공적연금이 약화된 개개인이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없는 일이다. 아이들을 부양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아무도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착취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자본가들 입장에서야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 것과 달리 이미 노동력을 소진한 노동자들은 내다 버리고 싶겠지만 말이다.

문제는 부양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 떠넘길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충분한 노후 대책이 없으면 결국 그 자식들이 개인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이는 빈부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처럼 연금도 무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 비용은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이를 시행하기에 부족한 것도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무척 빠르다며 노인 인구 비율이 1970년의 4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기간 GDP 규모는 5백14.7배 늘었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에 현재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 수입 외에 GDP의 4.1퍼센트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OECD 평균(GDP의 3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부가 추가로 재정을 투자하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최영준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과 심지어 진보진영에서조차 대체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만 쟁점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만하면 ‘선방’했다는 투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조차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수준으로 낮춘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5월 2일 여야 합의안(이하 5·2 합의안)은 사상 최악의 개악이다. 처음엔 개악 수준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터뜨리던 보수 언론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사실, 이번 연금 전투의 핵심 전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이지 국민연금 개선이 아니다. 당연히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승부수를 던졌다. 따라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국민연금 상향 조정을 위한 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다. 계급투쟁의 동역학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국민연금 상향’을 떼어 놓고 사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이하 연금행동)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국민연금 개선만 요구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 연금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연대체다. 그런 연대체가 지금 사실상 5·2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연금을 희생해 만든 공적 연금 강화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날 상황에 처해 있다” 하고 걱정했다.

연금행동의 주요 소속 단체인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5·2 합의안을 “중대한 사회적 합의”였다고 추켜세웠다. 연금행동의 정책위원장이었던 김연명 교수는 이번 5·2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연금행동이 실무기구 참가를 결정한 바 없고 공무원연금을 양보해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채택한 바 없으므로, 김연명 교수가 연금행동을 대표해 실무기구에 참가한 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는 연금행동이 5·2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 촉구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며 정책위원장 직책을 사임해 버렸다.

연금행동의 이런 태도는 직권조인 때문에 공무원노조 내에서 커다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종재 위원장을 사실상 두둔하는 것이다. 반면, 5월 28일 개악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력에 훼방을 놓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모순과 동요

민주노총의 혼란스러운 태도가 상황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2 합의안이 발표되자 5월 4일에 “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는 성명서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퍼센트 상향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나란히 냈다. 개악안 저지와 개악안 통과를 동시에 주문한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상향 이행” 주문 성명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순과 동요는 멈추지 않았다. 5월 18일 연금행동이 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50퍼센트만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지지함’으로써 또다시 모순을 드러냈다.

전교조와 노동자연대 등은 5·2 합의안 폐기와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기자회견 기조에 넣을 것을 제안했지만, 연금행동은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실무담당자는 연금행동의 결정을 지지했고, 민주노총은 이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50퍼센트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를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와 소득대체를 50퍼센트 합의 이행 요구는 양립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동요와 모순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수 없고, 따라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 삭감을 막을 수 없다면 공적 연금 강화라는 ‘어음’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개선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맞바꾸는 것은 노동계급 내 단결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훨씬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국민연금의 진보적 강화를 위한 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는 후보 시절 사회연대전략이 정규직 양보론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통한 공적연금 강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노동운동 안팎의 개혁주의자들이 5·2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지금, 이런 원칙 있는 입장을 다시금 확고히 다잡아야 한다.



사상 최대 개악안에 직권조인한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박천석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례로 뒤돌아선 것과는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셈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악의 “폭과 속도”에 불만족을 표시했지만 일단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상향과 관련해서는 “연금 포플리즘”, “국가 재정 파탄” 운운하면서 분명하게 반대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4월 24일 비상총회를 이유로 공무원노조 간부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개악 추진 방식을 놓고 여야 합의 존중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청와대와 긴장을 빚기도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50퍼센트 명기에서 계속 물러서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50퍼센트가 지고지선의 숫자는 아니다”고 말하더니 최근에는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먹튀’를 정당화했다.

청와대·여야 등 지배자들은 하나같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는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연시하고 있다. 지켜보는 공무원 노동자들로선 분통 터질 일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명해지면서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 5월 2일 이종재 집행부가 조직적 결정

을 어기고 개악안에 “직권조인”했기 때문이다. 이종재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압도적 거부와 여러 지부장들과 현장 간부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부딪치자 “책임 지고 사퇴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 사퇴 선언을 번복했다. 공무원노조 본부장단은 지난 15일 이종재 집행부가 “민주노조[의] 송고한 가치”를 훼손했고, 사퇴 번복으로 조직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다시금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이종재 집행부는 공무원연금을 양보한 것 못지 않게 다른 많은 것을 얻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이번 여야 합의안 중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 공무원노조가 참가하게 돼 법외노조임에도 교섭권을 갖게 됐다는 점을 커다란 성과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이번 개악안이 “자기들의 팔다리가 잘리는 합의”(〈공무원U신문〉)였다고 할 정도인데, 교섭권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맞바꾼 게 성과라고 할 수는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섭권이란 말인가?

총투표

한편 이종재 위원장은 개악안을 ‘조합원들에게 물어 보겠다’며 5월 30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개악안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5월 28일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를 앞두고 투쟁은 전혀 조직하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 소집을 예고하다니, 속셈이 뻔하다.

개악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조합원들이 실의에 빠지면 투표 용지를 돌리며 개악안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조합원 총투표는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직권조인을 정당화하려는 술책일 뿐이다.

개악 저지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기는커녕 조합원들을 절망과 자포자기로 몰아넣은 다음 의견을 물겠다는 것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노조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무엇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안 본회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50퍼센트를 두고 “확정치나 목표치냐” 하며 말장난하는 주류 양당에 맞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 노후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주류 양당에 맞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해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투쟁 목표를 재천명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포기한 이종재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은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본부장단은 단지 지도부 사퇴만 요구할 게 아니라 개악 저지 투쟁 조직에 나서야 한다.

지금 공무원노조 내 일부 지부장들과 활동가들은 5월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모아내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사 개악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할지라도 공무원연금 개악에 공무원노동자들이 합의한 게 아니라는 것,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도 공무원연금을 사수하는 게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마지막까지 투쟁 조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고 5월 28일 국회 앞 집회가 실질적인 연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장호중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실행 메커니즘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주장이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했다. 2007년에는 국민연금을 삭감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사회연대전략의 가장 최신판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부 받아들이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가 이런 합의안을 채택하자 그동안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해 온 노동조합·NGO 지도자들이 이 합의안을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사회연대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에 그는 이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상향 평준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최근 행동을 보면 기존 사회연대전략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당시 정용건 후보의 선대본부장이기도 했던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임기 중에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하고 그 대신 사회적 간접임금(복지)을 올리자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 ‘보험료를 더 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자’, ‘성과급을 일부 양보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 등 사회연대전략의 전술적 응용들은 다양하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연대해야 한다는 정신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회연대전략은 비현실적이다. 우선,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삭감분 중 20퍼센트를 국민연금 상향 개선에 사용하자는 5·2 여야 합의에 강경하게 반대했다.

오히려 박근혜와 역대 정권은 ‘재정



사진 출처: 청와대

기업주들의 이윤을 우선하는 국가 이들에게 양보한다고 해서 과연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까?

절감’을 내세우며 복지를 축소하거나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렇게 줄인 만큼 기업주 등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감해 줬다. 이른바 부자 감세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장해 줬다. 신규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 때문에 신규투자를 꺼리면서 이 핑계로 더한층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악을 저지하고 정책 방향을 돌려놓지 않는 한 그 정부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훨씬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고 마지못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려면 기업주·부자들이 정부에 가하는 압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노동계급에 필요하다. 정부가 단지 자본가들의 압력에 반응해 정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목적의식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국가와 복지’ 절에서 다룰 것이다.)

계급투쟁

사회연대전략 제안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先) 양보’와 ‘국민적 이익’이라는 (포퓰리즘적) 명분을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 하지만, 이는 거의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한다. 국민

혈세 부담을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악의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선취한 데서도 보듯이 오히려 지배자들이 ‘국민적 이익’을 앞세워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한다.

진정한 힘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저항에서 나온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에 꿈쩍도 하지 않던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1일 공무원 노동자 12만 명이 집회에 나온 것을 보고 나서야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물론 노조 지도자들에게 양보를 받아들이도록 해 투쟁의 김을 빼는 것이 진정한 속셈이었지만 말이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회 개혁이 이뤄진 시기는 거의 예외 없이 계급투쟁 수준이 높은 시기였다. 지배자들은 양보하지 않았다가는 체제를 위협할 더한층의 저항에 부딪힐까 봐 개혁을 제공해야 했다.

예컨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급성장한 투쟁적 노동운동 덕분에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빠르게 인상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됐다. 오늘날 민주노총의 토대가 될 민주노조들이 설립됐다. 1973년부터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던 국민연금 제도가 이때 실시됐다.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제도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확대 시행된 것도 1987년이였다.

유럽에서도 사회복지 제도들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였다. 전후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분출했다. “1944년의 [영국의] 노동쟁의는 1천2백53건이었고, 이것은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노동쟁의가 가장 많았던 그 전 해보다 50퍼센트 증가한 수치였다.”(토니 클리프 외,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그래서 영국 지배자들은 “우리가 개혁을 양보하지 않으면 혁명을 보게 될 것”(퀸틴 호그 당시 보수당 의원)이라는 두려움에 떨었다. 스웨덴·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 (필립 암스트롱 외,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따라서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의 보편적 이익에 기여할 사회 개혁을 쟁취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 전

체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에 대한 공격에 맞설 조직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저항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해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연대전략과 노동자 연대

물론 계급투쟁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을 때도 정부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복지 확대나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을 하거나 심지어 일시적 양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계급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혁만으로는 개혁의 지속을 강제할 수 없다.



사진 출처: 김대

양보를 통한 연대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 개혁의 진정한 힘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에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림1. 노동소득분배율 추이(197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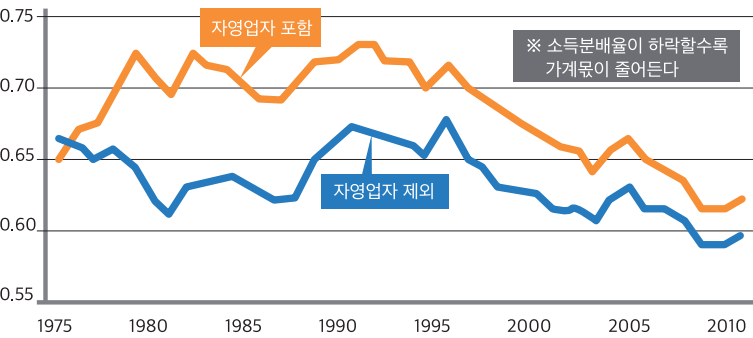


그림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추이(200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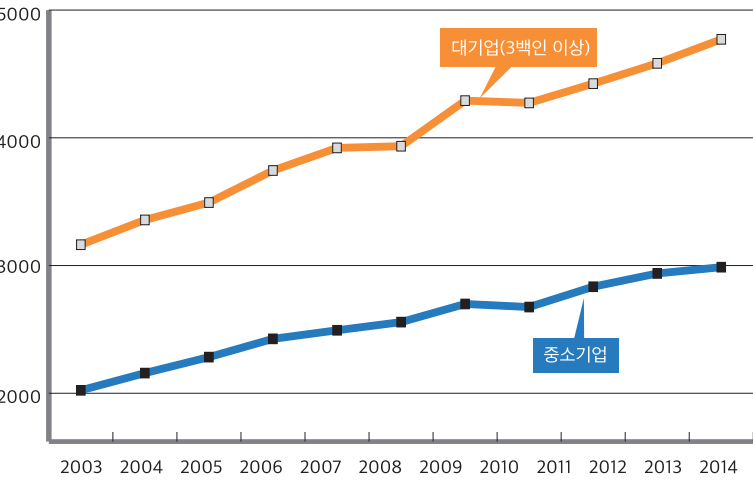


그림1 비정규직의 몫을 가져간 것은 기업주들이지 정규직이 아니다.

그림2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은 함께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는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고 국민연금 제도를 입안했다. 연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막대한 기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가 폭등으로 경제가 위기를 맞자 시행 며칠 전에 갑자기 폐기해 버렸다.

또, 정부와 행정기관들은 국회 합의나 제도들, 법률들을 무시하기 일쑤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삭감을 추진할 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국민연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초연금(소득대체율 10퍼센트) 도입을 요구했다. 그렇게 하면 두 연금을 합쳐 실제 소득 대체율은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기초연금 도입 약속만 믿고 국민연금 삭감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실제로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2008년부터 국민연금금은 크게 삭감됐지만 기초연금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뒤 이를 철저히 무시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이를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의료 민영화는 또 다른 사례다. 박근혜 정부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시행규칙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불법파견을 금지한 법과 법원 판결

을 무시하고 정부는 그 사이에 오히려 법을 개악하려 한다.

한편, 사회연대전략이 어떻게 노동자 투쟁을 마비시키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이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5월 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등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NGO 지도자들이 합의안을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같은 시간에 합의안 반대를 외치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지도부가 투쟁을 조직하지도 않고 양보안에 서명한 것을 보며 사기가 떨어졌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자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전술’이 정부·여당을 분열시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권은 열흘 만에 의견 조율을 마치고 다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우리 측은 주요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에게 개악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심각한 내용을 꺾고 있다.

요컨대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양보적 합의는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꺾어 개혁의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킨다.

국가와 복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용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국가가 중립적이어서가 아니다.

계급투쟁의 압력에 떠밀려 복지와 고용 제도를 일부 개선할 때도 국가는 이를 자본가들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방향을 조정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언제나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가 고용 관련 규제 자체는 자본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지만, 자칫 과도한 이윤 경쟁이 착취의 원천(노동력)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또 노동 생산성과 능률을 높이려면 단지 쥐어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고용과 복지 제도를 자본가들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려 하는 것이지 모조리 없애려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주의적 노동자 정당이 집권한 곳에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에서조차

노동자들이 받은 복지 혜택이 사실은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됐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복지 제도를 대폭 도입했지만 그 비용은 근로소득세와 간접세를 인상해 마련했다. 반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했다.

스웨덴 ‘연대임금정책’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평준화하는 효과를 냈지만 동시에 그 목적은 전체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LO) 지도자들은 임금 협상에서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을 한참 밑도는 수준에서 서명하기 일쑤였다. 결국 1960년대 말 노동자들은 비공인 파업으로 이에 항의하며 기존의 임단협 체계(살쥬바덴 협약)를 무너뜨렸다.

1987년 투쟁의 여파 속에서 자리를 잡은 한국의 국민연금도 노동자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노후 생계수단이지만 자본가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노동자들이 보험료의 절반이나 부담해

야 하고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들에게는 더욱 불리하다.

게다가 노인들이 빈곤에 지쳐 자살하고 있는데도, 쌓아 둔 기금으로 정부는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엄청난 기금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은 결과 한국의 어지간한 대기업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거나 대주주다. 기금 관리는 밀실에서 이뤄진다.

건강보험 도입은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병원과 제약회사에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는 구실도 한다. 국내 대형 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것은 건강보험이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면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나 무상복지나 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담을 지워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국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노동자들이 더 내도(양보해도) 제도 효과 덕분에 결국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회연대전략이 위험한 이유다.

사회연대전략에 깔려 있는 잘못된 가정들

일부 좌파는 사회연대전략을 절반쯤만 반대하는 듯하다. 개혁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이런 주장들은 대개 노동자들의 조건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나 인상론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계급투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 쉽다.

첫째, 노동자들 내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 이제 더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격차를 키우는 구실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몫이 정해져 있다는 ‘임금기금설’(친자본주의 고전경제학과 리카도와 밀이 주창함)을 연상시킨다. 그 실천적 함의인즉슨, 투쟁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결국 힘 있는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되는 결과만을 낳아 노동계급 내부 격차가 더 벌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정용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그렇지 않다. ... 만약 정규직 임금만 따진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과거보다 훨씬 상승했을 겁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인상론적 평가일 뿐이다. 2013년에 <경향신문>이 국내 5백 대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기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많은 진보적 학자들이 지적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몫을 가져간 것은 기업주들이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활용 비중이 높을수록 임금소득분배율이 낮다는 분석 결과는 ... 노동소득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 이상으로 생산의 과실을 생산요소들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강조는 인용자)을 시사한다”(한국노동연구원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2014. 12.)

실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은 함께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 간격은 때로는 더 좁아지거나 넓어지기도 하지만 결코 완전히 반대로 향하지는 않는다. 또, 완전히 같아지지도 않는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자본가들은 그만큼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 둘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반비례한다.

둘째,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조건이 비슷해져야 자신들이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계급의식’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야만 연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사회학의 용어를 빌어 이를 ‘계급 형성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위해 일시적 후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삶의 동질성은 같은 계급이라고 느끼게 해 주는 한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먼저 ‘계급의식’을 획득한 뒤에야 계급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계급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생산관계 속에서의 객관적인 위치에 따른 범주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의식’ 이전에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물질적 조건이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키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조건을 지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계급의식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셋째, 그럼에도 최근 노동자 투쟁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 종종 엉뚱한 데서 패인을 찾곤 한다. 더도 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벌어진 노동자 투쟁만 보더라도, 핵심적인 걸림돌은 평조합원들의 ‘의식’에 있다가보다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있었다.(관련 기사 8~9면)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은 아니어도 지도부가 전투적으로 투쟁을 이끌면 이에 호응한다. 9년 만에 연가 투쟁에 들어간 전교조가 보여 주는 바다.

좌파의 과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고 승리에 이를 수 있는 전술을 제시하며 기층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회연대전략의 문제점을 잘 간파하고 불필요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시리자 정부의 후퇴를 막기 위해 행동하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에 굴복해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방관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최신 소식을 전한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5월 11일 시리자 정부는 EU 재무장관들과 협상을 벌였고, 5월 12일에는 IMF에 7억 7천만 유로의 채무를 상환했다.

EU와 IMF는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내주지 않고 그리스를 파산 직전 상태로 내몰면서 그리스에 '개혁'을 강요한다.

시리자는 연금을 절대 깎지 않겠다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 연봉 1만 2천 유로 이하 면세 제도 부활 약속도 연기했다.

시리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의 하나인 피레우스 항구를 민영화하기로 동의했고, EU는 이제 에너지 부문도 민영화하길 원한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헬레닉 페트로리엄 정유 공장 노동자들은 민영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5월 8일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6명이 심하게 다쳤다.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전체 정유 공장이 파업에 들어갔다.

피레우스 항구의 항만 노동자들도 5월 7일 파업에 들어갔다.

5월 11일 아테네에서는 [전임 정부가 건축의 일환으로 폐쇄한] 국영방송국 ERT의 해고 노동자들이 방송국을 향해 행진을 벌였다. 이 노동자들을 복직시킨다는 법은 통과됐지만, 정부는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노동자들이 알파벳순으로 조금씩 복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

그래서 ERT 노조는 법을 직접 실행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방송국을 온



전히 운영하라고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주요 시리자 의원들이 ERT 노조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으로부터도 노조를 옹호하고 있다.

병원 노조들은 5월 20일 전국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을 쓰라고 요구한다. 이 노동자들의 요구는 EU의 건축 요구와 충돌한다.

정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현금을 모두 그리스 중앙은행으로 보내라고 했다. 공공기관들의 현금이 바닥이면 임금이 체불될 것이다.

시리자는 건축 정책에서만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시리자 정부는 전투기를 보내 반혁명 대통령 압델 파타엘시시의 이집트 군대와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게 했다.

외무장관 니코스 코치아스는 파시스트인 황금새벽당 의원들을 국방

별위원회에 초대했다. 그 의원들이 범죄 조직 결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말이다.

시리자 정부가 [2월 20일 EU와] 건축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크다. 지난 정부도 건축에 동의했고, 그 결과 무너졌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건축 연장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건축 연장안은 시리자 당원들의 반대를 거스르고 우파의 표를 끌어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시리자 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 아니나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 민중이 투쟁으로써 제기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53호 / 번역: 최병현

그리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좌파 정부의 장관이 되면 혁명가들의 영향력은 격감한다

차승일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하면서 그리스 좌파 안에서 전략·전술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혁명적 좌파가 시리자 정부에 입각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문제다. 혁명가들이 시리자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리자 지도부를 왼쪽으로 끌어당기거나(전인론), 적어도 시리자 지도부가 우경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우경화 방지론). 둘째, 장관의 권한으로 혁명가들의 강령을 실행할 수 있다(권력 지렛대론). 셋째, 혁명적 좌파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영향력 확대론).

이런 주장들의 현실 적용 사례는 시리자 내 좌파적 의견그룹 네트워크인 '좌파 플랫폼'의 리더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이다. 라파자니스는 시리자 정부의 생산성재건·환경·에너지부 장관을 맡았다. 장관 취임 직후 그는 전임 정부가 시행하던 전력회사 민영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총리 치프라스의 우경화 행보를 비판하는 좌파적 인물로 종종 언론에 이름이 등장한다. 특히,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례는 생태녹색당(OP)이다. 생태녹색당은 2012년 6월 총선에서 0.88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했지만, 2015년 총선에는 시리자와 연합해 국회의원도 한 명 배출하고 장관직도 하나 얻었다.

그래서 많은 좌파의 눈에 시리자 정부 참여는 소규모 단체의 일원으로 자기 사상을 끝까지 지키

기도 쉽지 않고, 또 보수적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주의자라고 은근히 업신여김 당하며 눈칫밥 먹기 일쑤인 처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지름길

그러나 여러 역사 속 선례와 선현 격인 사회주의자들의 논증을 보면, 이 길은 삼천포로 빠져 심지어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길이다.

당장 지난 4개월가량의 경험만 봐도 시리자 정부에 참여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박약하다. 첫째, 시리자 좌파는 시리자 정부의 우경화를 막지 못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시리자 지도부는 계속 우경화했지만, 시리자 좌파는 이를 막지 못했다.

둘째, 시리자 정부의 전반적 후퇴 속에서 당 좌파 소속 장관들의 정책도 대폭 후퇴하거나 동결됐다. 라파자니스 장관이 선언한 민영화 중단도 마찬가지로 신세가 됐다.

시리자 지도부의 우경화를 막지 못한 데는 시리자 좌파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와 당의 거듭된 좌파 통제 강화로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시리자 좌파도 좌파 정부 수립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도부의 행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집권 전에는 시리자의 집권을 어렵게 할 만한 주장과 행동을 하지 못했고, 집권 후에는 시리자 정부에 부담을 줄 만한 주장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건축을 막을 힘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에 있다 5월 11일 국영방송국의 해고 노동자들이 방송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혁명가들은 좌파 정부에 독립적으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를 판매하고 있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활동가.



1936년 스페인에서 좌파가 정부에 입각한 경험은 재앙으로 드러났다 파시스트 프랑코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노동자들.

역사적 사례: 1936년 스페인 카탈루냐

사실, 좌파 정부에 들어가 좌파적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 혁명적 조직들의 경험이 있다.

1936년 2월 스페인에서는 선거를 통해 공산당과 친자본주의 중간계급 정당이 연립한 인민전선 정부가 등장했다. 그전 몇 해 동안 일어난 강력한 계급투쟁 덕분이었다.

그러나 5개월 뒤 인민전선 정부에 맞서 파시스트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이끈 반혁명적 쿠데타가 일어났다. 스페인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고 반격에 나섰다. 농민들도 따라나섰다. 내전이 일어났고 스페인 국가는 해체됐다. 많은 지역에서 노동자나 농민의 혁명적 위원회가 들어서, 해체된 국가를 대체했다. 혁명적 위원회들은 파시스트 군대와 싸움 의용군 모집, 식량 배급, 교통, 보건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노동계급의 지방정부 구실을 했던 것이다. 전선에서는 병사들이 직접 장교를 선출했고, 경계가 금지됐고, 군사 전략을 투표로 결정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혁명적 활동이 파시스트 쿠데타를 저지할 유일한 동력이었다.

이런 혁명적 운동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곳이 바로 카탈루냐였다. 카탈루냐 주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와해된 상태였다. 카탈루냐의 실질적 권력은 혁명적 아나키즘 경향의 단체이자 카탈루냐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전국노동조합총연맹(CNT)이 보유하고 있었다.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의 동기가 없으면 정부의 명령은 시행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은 권력 행사를하기를 거부했다. 심지어 카탈루냐 주정부 의장인 루이스 콤파니스가 의장직을 넘겨주겠다는데도 거부했다. 콤파니스와 만난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지도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콤파니스는 카탈루냐 주민과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그가 의장으로 계속 남기를 바란다.” 1936년 9월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은 카탈루냐 주정부에 참여했다.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POUM)은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1936년 7~8월 당원이 네 배로 증가하면서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은 카탈루냐에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다음으로 큰 조직이 됐다.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도 1936년 9월 카탈루냐 주정부에 참여했다.

파시스트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수도 마드리드가 프랑코에게 함락되기 직전야야 인민전선 정부에 무기를 공급했고, 이를 지렛대로 해서 스페인 공산당의 영향력이 커졌다. 프랑코의 반혁명만큼이나 노동자들의 혁명적 운동을 두려워한 친자본주의 정당들과 동맹을 맺고 있던 공산당은 노동자 투쟁을 관리하려 애썼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의용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옛 군대와 같은 형태의 상비군을 재건했다. 파시스트를 저지할 유일한 힘을 제어하고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을 부활시키는 조치였다.

혁명이 가장 전진한 카탈루냐 주 수도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과정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카탈루냐 주정부에 포함된 전국노동조

합총연맹 소속 장관들은 처음에는 정부의 명령에 항의하며 사퇴했지만 3주 뒤 정부에 복귀했다. 그 뒤 노동자들과 정부군의 전투가 닷새 동안 계속됐다. 이제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들에게 투항하라고 요구했다.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은 처음에는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을 설득해 노동자들 편에서 전투를 벌이려 했지만,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설득되지 않자 나중에는 자기 당원들에게 전투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트로츠키는 혁명과 개혁 사이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을 ‘중간주의’라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혁명의 마지막 불씨가 꺼졌고, 결국에는 프랑코의 파시스트가 승리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 사회주의자가 자본주의 국가 분쇄 전에 정부에 입각해서 활동한다는 전략은 1890년대 말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정부에 입각했던 사회주의자 알렉상드르 밀랑은 몇 년 뒤 사회주의를 포기했다.(크리스 하먼, ‘진보-개혁 연립정부는 지속 가능한가?: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마르크스21》 10호 참조)

물론 현재 그리스 상황은 1930년대 내전 직전의 스페인과 다르다. 군부가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징후도 없고, 국가 부도 위기를 이용하려는 극우의 감정적 거짓 선동이 매우 잘 먹혀, 파시즘이 권력을 잡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 상황은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의 사례는 아무리 혁명가라도 자본주의 국가가 가하는 압박은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혁명가는 좌파 정부에 대한 좌파적 야당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가들이 좌파 정부의 등장에 무관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좌파 정부의 등장으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이 고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리자의 집권은 한편으로, 경제 위기와 긴축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리자는 국내외 운동에 우경화 압력도 끼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각국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당론으로써 확고히 반대해 왔던 독일 좌파당이 2월 20일 유럽연합과 시리자 정부의 구제금융 연장 합의를 놓고 내분을 겪었다(당 소속 의원 64명 중 다수 찬성, 10명 기권, 3명 반대). 여기에는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가 직접 좌파당에 연락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큰 압력으로 작용했다.(김종환, ‘혁명가들은 시리자가 후퇴할 때에도 지지해야 하는가’, 〈노동자 연대〉 147호 보충판 참조)

그래서, 좌파 정부가 등장한다고 해서 운동이 필연적으로 전진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적어도 선진적 노동자들이 정부에 독립적으로 투쟁할 때만 운동이 전진할 수 있다. 좌파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개혁의 수준도 노동자 투쟁에 달려 있다. 개혁을 쟁취하는 데서 결정적인 것은 지도자들의 협상 수완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투쟁의 힘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개혁주의적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투쟁을 벌이며 그 투쟁 속에서 이들이 스스로 좌파 정부에 대한 착각을 깨도록 해야 한다.

이것(즉, 공동전선)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과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가 실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운동이 있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안타르시아는 강경 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급성장하기 전인 2009년부터 ‘인종차별 · 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이라는 광범한 연대체를 결성해 운동을 조직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 실천이었다. 몇 년 동안의 투쟁 축적은 이후 큰 분출로 이어졌다.

2013년 가을 ‘인종차별 · 파시즘 반대 운동’은 인구 66만 명의 아테네에서만도 5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다른 좌파뿐 아니라 노동조합들(심지어 사회당의 영향력을 받는 노동조합들)도 이 시위를 지지한 덕분이다. 이 대규모 운동의 압력으로 당시 신민당 정부는 황금새벽당 지도자들을 범죄조직 결성 및 운영 혐의로 체포했다. 총리 자신이 황금새벽당을 연립정부에 포함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뒤로 황금새벽당의 성장세는 주춤했다.(물론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 좌파들의 중요한 과제다.)

이처럼,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 경험은 혁명적 좌파들이 좌파 정부에 입각하지 않고도 정치 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아쉽게도 시리자와 시리자 좌파는 3월 21일에 열린 대규모 반파시즘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2009년 작고한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좌파 정부들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주장했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노동자들이 ‘좌파’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착각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부분적 · 제한적 투쟁들에 모두 개입하고 이를 일반화하고 이끌어야 한다. 설령 이 투쟁들이 좌파 정부의 전략과 충돌한다고 해도 말이다. 요약하자면, 혁명가의 임무는 좌파 정부에 대한 좌파적 야당 세력을 조직하는 것이고, 국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게 하는 것이다.”

혁명가 장관과 자본주의 국가

그 밖에도 역사의 많은 사례를 보면, 심지어 혁명적 인물조차 정부에 입각하면 개혁주의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후퇴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후퇴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질서 유지 기능을 하는 자본주의적 국가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바로 그 과정에서, 한때는 좌파적이었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됐고, 많은 노동자 정당들이 자기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을 공격하

게 됐다. 현재의 그리스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우경화 · 후퇴 압력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폴란드 출신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위해 어느 직책을 맡아야 한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이나 어려움을 회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 정당에게는 활동 무대가 될 수 없다.

“부르주아 정부의 성격은 정부 각료 개인들의

성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에서 그 정부가 수행하는 유기적 기능에 달려 있다. ... 계급 지배가 지속되는 한 부르주아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로 변모할 수 없다.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장관으로 바뀔 뿐이다.

“부르주아 정부에 사회주의자가 입각하는 것은 생각과 달리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국가를 부분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가 사회주의 당을 부분적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스 외채 위기와 시리자의 부상

— 좌파 정부는 긴축을 끝낼 수 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외 지음, 차승일 엮음, 책갈피, 12,000원, 232쪽

그리스 사회주의자들과 알렉스 캘리니코스 등 8인이 시리자 집권 배경과 시리자 정부를 둘러싼 논쟁 등을 소개한다. 또한 나치 황금새벽당을 저지하려는 그리스 현지의 투쟁, 시리자 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반자본주의 좌파인 안타르시아와 공산당의 역사와 활동도 다룬다.

노조 관료주의와 현장 조합원 운동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최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10년 만에 등장했다는 좌파 지도부도 민주노총의 다른 지도자들에 포위돼, 공무원연금도 공약대로 지키지 못하고, 현대차노조의 이례적인 강파 지도자도 어찌지 못하고 부담스러워 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며 노동조합 관료(지도자들)라는 특별한 사회계층의 성격에 대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통찰을 돌아볼 필요성을 느낀다. **김중환 기자가 그 통찰을 정리해 보았다.**

노동조합 관료에 대해 알려면 먼저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모순된 위상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거의 모든 부를 만들지만(농민 같은 농촌과 도시의 전통적 중간계급들도 부를 생산하지만 노동생산물의 가치에 견주면 비할 바가 못 된다), 그 부는 한줌 밖에 안 되는 자본가들이 차지한다. 자본주의의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노동자들과 노동력 사용자들 사이에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노동자들은 단결을 도모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 단체로 목소리를 내고 물칠 필요를 느낄 때 만드는 조직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혁명적 조직이 아니다. 노조에는 세누리당을 찍는 사람부터 자본주의를 전복하길 바라는 혁명가까지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가입한다. 또한 노조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부분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때문에 부문주의적이지 않다. 즉,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부분의 노동자만을 대변하고, 다른 노조와 경쟁하기도 한다.

게다가 한국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미흡하거나 자리 잡은 나라에서 노조는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수용한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조건과 같은 요구는 '비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 요구'라 해서 노조가 제기할 수 있지만, 더 광범한 사회 변화는 개혁주의 정치인과 노동자 정당이 제기해야 할 요구라고 생각한다. 노조 지도부가 "선거로 심판하자"면서 궁극적으로 파업을 약화시키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는 이유다.

중재

이 모든 일은 노조가 착취에 맞선 투쟁의 중심에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착취 자체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착취의 조건만을 개선하려 해서 생기는 일이다.

‘노조 관료’는 단순히 욕하고 나무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노조의 이런 모순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노조 기구를 유지하려면 일단의 관료(각급 ‘위·수·시·들’)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관료는 자신이 생겨난 물질적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조 관료는 노동 현장의 일상과 그곳의 동료 조합원들에게서 떨어져 활동하는 고위 상근간부층이다. 그들의 일상선 사용자와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 즉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다.

가장 전투적인 현장조합원이 노조 관료가 되더라도 그도 타협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현장파가 올라가면 국민파 된다”는 말은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좌파 노조 지도자가 결정적 순간에 파업을 철회하는 경우도 물론이고, 브라질에서 전투적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으로 대통령이 돼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블라. 남아공 광부노조 지도자 출신으로 ANC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앞장서 온 시릴 라마포사, 이집트 독립노총의 핵심

활동가에서 오늘날 반혁명 군부 정권의 노동부 장관이 된 카말 아부 아이타까지 이런 사례는 국제 노동운동 역사에 수없이 많다.

노조 관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원천인 노조 기구를 보존하는 데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노조 관료에게는 수동적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의 투쟁보다 자신의 협상 수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자란다. 특히, 정부나 사측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일 수 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려면 파업이 꼭 필요한 때조차 말이다. 또한 관료 부문 자체의 이익을 내세우고,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분리시키는 경향도 자란다.

노조 관료는 불만을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만큼 자본가들의 압력과 현장 조합원들의 압력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한다. 노조 관료는 등 떠밀려서 노동자 투쟁을 이끌 잠재력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진정한 총파업처럼 투쟁이 자본주의와 타협할 여지를 위협하면 더욱 그렇다.

때때로 관료식 대응이 성과를 내기도 한다. 정부나 사용자들이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해당 정권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대대적 투쟁 없이도 노조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나쁠 때 그런 식의 대응은 일을 그르치게 만들 뿐이다.

예컨대 경제 전망 악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지배자들의 공세가 드센 지금, 공무원노조가 연금을 온전히 지키려면 전투적으로 파업을 벌여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큰 정치적 판돈을 걸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겁에 질릴 만큼의 노동자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나쁠 때 그런 식의 대응은 일을 그르치게 만들 뿐이다.

노조 관료는 흔히 이런 타협이나 투쟁 회피에 반대하는 조합 활동가들과 좌파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전투적인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들은 무관심하거나 보수적이다” 하고 말하며, 노조 내 분열을 일으키기 말고 단결하자고 호소한다. 노동자들이 ‘단결’이라는 말에는 반응적으로 그 기을이 있는 것을 파고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단결’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가장 팔레스타인계 영국인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는 노조 관료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들은 개혁주의적인 동시에 겁쟁이다. … 그들은 개혁을 선사하길 원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진지하게 깊고 짧은 것을 대보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가 개혁을 허용하기는커녕 기존에 허용한 것마저도 도로 빼앗으려 한다.) 그러면서 개혁을 이를 유일한 방법인 현장 조합원 투쟁은 두려워한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현장 조합원들이 지도부와 독립적으로 행동할 태세를 갖출 때 지킬 수 있다.

지도부가 아니라 현장 조합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

물론 노조 관료가 다 같지는 않고 그들 중에도 상대적 좌파와 우파가 있다. 그러나 노조 관료 내 좌우 구분보다, 노조 관료의 영향력이 현장 조합원의 영향력과 반비례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좌파 노조 지도자도 다른 노조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조 관료로서 받는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좌파적 노조 지도자도 다른 노조의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그와 결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무원노조 이총재 집행부의 타협에 침묵하거나, 4·24 파업을 비난하고 지역실천단장을 집단폭행한 현대차 이경훈 조합원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그 사례일 것이다.

앞서 말한 노조의 모순된 성격을 보지 못하면 삼라만해 치달아, 노동자 운동에 환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투쟁 노조 지도자가 문제라고 여기는 이들도 흔히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가곤 한다. 그 지도자가 투쟁을 이끌지 않는 것을 그저 비난만 하고 투쟁 일기기를 방임하거나, 아니면 더 좌파적인 지도자를 무비판적으로 예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두 경우 모두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행동할 잠재력을 기각한 채 노동

조합을 상의하달식으로 이해하는 오류(이는 노조 관료의 관점이기도 하다)에 빠지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낳는 모순을 이해하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나서 이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단결을 이루도록 고무해야 한다. 이때 분석상 선차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적대 관계에 있고 그 결과 노동조합이 결성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자 대중과 노동조합 관료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조 관료 가운데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하고 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려면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건은 현장 조합원 수준에서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지도자를 압박하고 투쟁 일기기를 방임하거나, 아니면 더 좌파적인 지도자를 무비판적으로 예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두 경우 모두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행동할 잠재력을 기각한 채 노동

“우리는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올바른 대변하는 한 지도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독자적 행동을 나설 것이다.” 여기서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이 공문구가 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현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의 신망을 받는 투사들이 투쟁 전부터 네트워크를 건설·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클라이드노동자위원회는 그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각 작업장의 대표로 이뤄져 있고 날아빠진 규칙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정서를 대변하려 한다.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열망이 있으면 언제든 즉각 행동에 나선다.”

트로츠키가 공동전선에 대해서 한 다음 말은 노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중들은 언제나 함께하지만, 동요하는 지도부와는 그들이 대중의 선두에서 있을 때 한해서만 함께한다. 대중의 압력에 떠밀려 지도자가 동요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도자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결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활동가 폭행도 서슴지 않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 이런 자가 여전히 징계받지 않는 것은 다른 노조 지도자들도 노조 관료로서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계가 분명한 전략1: 좌파 지도부 세우기가 목적인 전략

노동조합 운동 안에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주장이 있다. 노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좌·우파를 구분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범좌파’ 연합을 통해 선거에서 좌파 활동가가 당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더 전투적인 노동조합 정책을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관료들 사이의 정치적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 관료와 현장 조합원들이 물질적 이해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좌파 지도부의 등장은 노조 관료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조인 경우가 많다. 노조가 정부와 사용자들

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노조 내 최상의 활동가들이 조직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의 반영이기도 하다. 게다가 좌파 활동가가 집행부 상근간부직에 오르면 노동자 투쟁의 명분을 대변하고, 정치적 운동에 연대하고, 기층 활동가들을 돕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하다.

그러나 좌파 지도부 세우기뿐인 전략의 한계는 노조 관료의 구실에 지나친 기대를 갖고서 공식 노조 기구를 좌파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지도부한테서 독립적으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현장 조합원 네트워크의 힘과 자신감을 키

우는 것이야말로 투쟁하는 노조를 만들고, 관료들이 보수적 압력에 밀려 후퇴하는 것을 막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도 말이다.

이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 준 것은 영국 광원들의 1972년과 1974년의 파업이었다. 당시에는 지도부에게서 독립적인 아래로부터의 주도력과 동력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심지어 위원장이 우파적 인물이었음에도 노조 역사가 최대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반대로 광원들이 1984~85년에 최악의 패배를 겪을 때 당시 위원장(아서 스카길)은 좌파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 광원노조 등에서 현장 조합원 네트워크는 전보다 약해져 있었다.

한계가 분명한 전략2: 따로 더 전투적이거나 더 좌파적인 노조 만들기

역사적으로 거듭 나타난 또 다른 경향은 활동가와 전투적 조합원들이 노조 관료의 보수적 통제력이 꺾이지 않는 것에 좌절해서 더 급진적인 노동조합을 따로 만드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이중 노조”를 만들려 한 아나키즘적 신디컬리즘(미국의 세계산업노동자同盟(IWW)이 가장 대표적이다), 1920년대 초 독일의 좌파 공산주의자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 공산당의 ‘적색 노조’ 등이 그 역사적 선례다.

레닌은 《좌파 공산주의 — 유치증》에서 이런 경향을 반대했다. 혁명가들은 기존 노조에서 지지자들을 조직하고, 진정으로 투쟁할 현장 조합원 위원회를 꾸려서 ‘기회주의적’ 지도자들

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자세한 레닌의 견해는 본지 146호 ‘노동 운동과 좌파파주의’를 참조시오.] 몇몇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따로 노조를 만든다는 전략은 다수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회피하고, 그 대신 전투적 조합원들을 덜 전투적인 조합원들한테서 떼어놓고 인위적으로 운동을 분할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노조 관료에 맞서 싸우는 대신 도망치는 전략이다. 그래서 기존 관료가 조합원 다수를 계속 장악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도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실상 현장 조합원들이 압력과 민주적

노조 관료의 모순된 처지 이용하기

오늘날 현장 조합원들은 자신감이 충분히 높지 않아서 행동에 나서려면 노조 지도부의 공식적 파업 선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훨씬 덜 느끼기 때문이다.

‘투쟁 없이는 강력한 현장 조합원 운동을 건설할 수 없는데, 오늘날 현장 조합원들은 자신감이 낮아서 관료가 앞장서야만 행동에 나선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바로 이 점에서 좌파 관료 중 투쟁하려는 조합원의 정서를 대변하는 이들이 (모순적이지만)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대대적 공세 때문에 오늘날 노조 관료의 일부는 자신들이 중재자로서 수완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과 조합원들이 일자리·임금·노동조건 악화에 분개하는 것 사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일부 노조 관료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기회를 열어 준다. 설명 그 파업이 실질적으로 투쟁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분노를 배출할 계기를 제공해서 조합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일 지라도 말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투쟁을 건설할 촉매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조 관료가 양쪽에서 모순된 압력을 받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현장 조합원과 노조 관료 사이에 일정한 동역학이 작동하면서 파업이 전개된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 클라이드노동자위원회가 활동한 1910~14년과 보수당 정부를 무너뜨린 1970년대 초의 파업 물결부터, 오늘날 시리자의 집금을 날기까지 서른 번 이상 이어진 그리스 총파업(윤라인 기사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그리스 노조 관료라고 더 전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조)까지.

이 파업들은 현장 조합원들이 지도부한테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 벌어지지 않았다. 제아무리 급진적이고 난 압력 때문에 일부 노조 관료가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심지어는 투쟁에 고삐를 죄우고 제한하려고) 공식적으로 파업을 선언하면, 현장 조합원 운동은 지도부의 공식 파업 선언을 활용해서 지도부가 애초 구상한 것 이상으로 투쟁을 밀어붙이고, 지도부에게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여지를 넓히는 기회로 삼은 것이 주효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몇몇거리고 배신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동역학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얼마나 높고 현장 조합원 네트워크가 얼마나 탄탄한가에 달려 있었다. 오늘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풀어

야 할 숙제는 이런 상충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투쟁에 동원할 태세가 된 노조 관료에게 혁명가들이 협력해 투쟁을 성사시키고, 전체 노동자 투쟁의 규모를 키우고, 그럼으로써 다시 현장 조합원들의 독자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도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그들의 자신감(지도부와 별개로 행동할 정도로는 높지 않은)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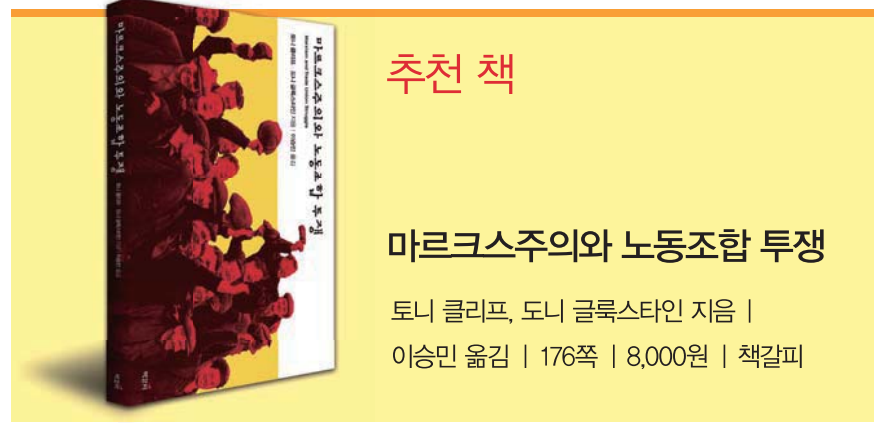
공동 행동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토니 클리프는 “현장 조합원 운동을 지도하는 혁명적 당과 노조 관료(좌파 관료뿐 아니라 때로는 우파 관료와도)의 공동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면서 이를 강조했다.

“이런 공동 행동은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대다수 좌파 노조 관료도 신뢰하기 어렵고 오락가락하지만, 혁명가와 관료의 일시적 동맹은 전체적으로 보면 노조 관료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당은 노조 관료 내의 좌우 분열과, 전투적으로 연설하는 사람(설사 말뿐일지라도)과 호시탐탐 타협하려는 사람 사이의 분열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분열을 이용해 현장 조합원의 독립성, 자발성,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즉, 혁명적 당은 현장 조합원들이 좌파 노조 관료를 신뢰하거나 그의 급진적 연선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조 관료가 전투적 노동자 투쟁에 앞장설 때조차 관료의 의도, 즉 그들이 [운동을 주도하면서] 그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을 조합원들에게 거듭 말해야 한다.”

혁명가들이 좌파 노조 관료에게 협력하는 것은 행동을 더 광범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다. 제아무리 급진적이고 멋들어진 연설도 노동자 대중 자신의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협력의 유효성을 판단할 기준은 오직 하나뿐이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 활동을 고무하는지, 그럼으로써 자신감과 계급의식을 자극하는지이다.

이 글은 다음 글들을 참고해 썼다. Charlie, Kimber, ‘Pressures that make union leaders buckle’, *Socialist Worker* no.1830, 14 Dec 2002. Darlington, Ralph, ‘The rand and file and the trade union bureaucracy’, *International Socialist*, Spring 2014. Robidoux, Michele, ‘How do we build a fighting labour movement?’, <http://www.socialist.ca/node/1974>, 2013년 11월 8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박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태세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악에 집중하겠다'며, 사업장별 임단협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중에 취업규칙-임금체계 개악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5월 7일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내렸다. 6~7월엔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발표가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거듭 "구조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을 해 나가야 할 이유다.

정부의 공격이 법 개악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지침 등으로 추진된다 해서, 사업장 별로 분산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4·24 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5~6월 투쟁 계획이 제때 제시되지 못하는 가운데,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이미 투쟁을 회피하거나 배신적 양보를 시도하는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핵심 작업장인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도 그중 하나다.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지난 3월 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던 통상임금 협상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투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심지어 사측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 개악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도 말이다.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와 기아차 김종석 집행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지만, 개악안을 강요하는 사측과 협상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사측을 지원하려는 마당에, 투쟁의 힘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사측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본격 추진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2015년 5월 1일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두 집행부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연대회의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에서 이 말은 투쟁을 늦추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 때도 서로를 핑계 대며 투쟁을 제한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올해 3월 말까지 사측과 합의를 연기시키며 투쟁을 마비시켰고, 김종석 집행부는 법적으로 좋은 조건을 활용해 투쟁을 발전시키기보다 이경훈 집행부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싸워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때문에 평조합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리다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임금 확대는 물 건너가는 것이냐. 임금체계 개악까지 도입돼 성과 경쟁에 내몰리고 임금이 깎이는 것이냐는 타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 8+8 노동제(1, 2조 각각 8시간 근무)와 관련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휴일·노동조합 활동 시간 등을 줄이는 양보안까지 내놔다. 이번에도 이경훈 집행부가 먼저 후퇴를 시작했고, 곧이어 김종석 집행부가 뒤를 이었다.

양보안

안 그래도 2012년 8+9 노동제(1, 2조 각각 8시간, 9시간 근무) 도입 때 노동강도가 세져 고충을 느끼는 노동자들은 이런 집행부의 양보안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아차에선 집행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는 항의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조합라인의 대의원들은 집행부 안 폐기를 촉구하며 조합원 서명, 협상장 앞 항의 시위 등을 하기로 했고, 좌파 활

동가들은 '협상 결렬과 양보안 폐기', '즉각적인 통상임금 투쟁 돌입', '비정규직 신규 채용안 폐기' 등을 내걸고 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연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기층 활동가들이 이 같은 항의를 더 강력하게 키운다면,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 타협 시도를 좌절시키고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차원의 투쟁도 긴요하다. 통상임금,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의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핵심 쟁점들이다. 이런 투쟁들을 사업장별 임단투로 흐트러 놔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런 분산적 투쟁은 사측의 취업규칙 개악에 취약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를 방치하는 결과도 낼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연금 개악안 합의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도 적용하고 싶어 한다. 정부도 독일에서 미니잡·파견제 등 저질 일자리를 대폭 늘린 '하르츠 개혁'을 "노사정 대타협 모델"로 추켜세우고 있다. 노사정위는 최근 '하르츠 개혁'의 주역 페터 하르츠를 초청해 강연회를 하기도 했다.

이럴 때 한국노총 집행부는 어물쩍 협상장으로 돌아가려 할 수 있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협상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저지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투쟁을 계획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가이드라인 발표 시 파업으로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데, 진지하게 이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지금부터 그 위험성을 알리며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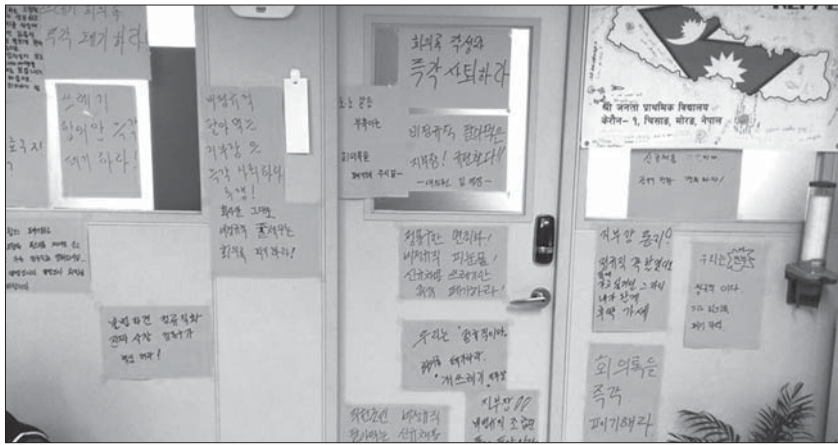
기아차

신규 채용 합의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있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금속노조 대의원

5월 18일 화성공장 민주광장에서 화성 사내하청 분회 조합원 3백여 명이 모여 '신규 채용 합의 폐기', '정규직화 쟁취'를 외쳤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 채용 합의에 분노를 토했다.

지난 5월 12일 기아차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는 내년까지 4백65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합의했다. 지난해 9월 25일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사측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 채용을 고집했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



"신규 채용 합의 즉각 폐기하라" 기아차지부 사무실 앞에 조합원들이 붙인 손자보.

하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 냈다.

이번 합의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투쟁하는 분회 조합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김종석 집

행부는 조합원의 압도 다수를 차지하는 화성·광주 분회가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직권조인을 해 버렸다. 게다가 적잖은 소하 분회 조합원들도 반

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합의는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가 지난해 사측과 체결한 신규 채용 합의와 똑같다. 이경훈 집행부의 신규 채용 합의는 그동안 노동운동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기아차에서 똑같은 합의가 이뤄지자, 이경훈 지부장은 "역사가 우리의 올바른 길을 입증했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노동운동은 결코 이번 합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활동가들이 앞장서 투쟁의 원칙과 대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화성 사내하청 분회는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하고, 소속 조합원 전원에게 '특별교섭 회의록 폐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사측과 집행부의 합의안을 폐기시키려면, 이런 항의를 키우며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투쟁의 만행이라 불리며 강력하게 싸웠던 자랑스런 역사도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정규직 활동가들이 사내하청 분회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대의원들은 신규채용안 폐기 등을 촉구하며 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연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정몽구는 틈만 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있다. 현장에서부터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요구를 지지하며 투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조선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지지한다

김지태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주요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를 결성했다. 이들은 고용 보장과 중대재해 근절을 골자로 하는 공동 요구안을 내놓았고, 공동 임금 투쟁도 결의했다. 그 첫 출발로 5월 30일 수천 명이 경남 거제에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번 공동 집회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조선 노동자들의 고통과 위기감이 있다. 이번 집회의 요구는 조선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첫째, 임금 인상이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계속 둔화했다. 심지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1인당 평균 연봉이 2백만 원가량 줄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동결과 낮은 임금 인상을 강요 받았다.

둘째, 고용 보장이다.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은 중소 조선소들이 먼저 맞았다. 단적으로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낸 보고서를 보면, 중소 조선소가 7년 사이에 27곳에서 6곳으로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중소 조선소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조선노연 소속의 성동조선과 신아SB 노동자들도 수년 전부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위기가 대형 조선소들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그나마 위기를 완화해 준 해양플랜트(석유·가스 채굴을 위한 해상 설비) 물량이 저유가로 인해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양플랜트 부문에 고용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만 올해 들어 약 3천 명이 해고됐고, 곧 1만 명이 해고될 수도 있다. 다른 조선소에서도



작업장을 뛰어넘는 연대는 작업장 내의 단결로 더 강력해질 수 있다 5월 14일 현대중공업 정규직·사내하청 노조 공동투쟁 결의대회.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도 위협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사무직 관리자 약 1천 명이 해고된 데 이어 여성 사무직 노동자 1백70여 명이 해고됐다.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들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 조선노연의 올해 공동 요구 중 하나가 '사내하청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이다. 정규직 노조들이 모여 있는 조선노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셋째, 중대재해(산업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한 것) 근절이다. 거대한 철골구조물에서 작업하는 조선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제 위기는 가뜰이나 위험한

작업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소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경제 위기 전보다 싼 값에 수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소들은 더 짧은 기간에 더 적은 비용을 들여 배를 지으려고 한다. 그 결과는 더 적은 안전 투자, 더 위험한 작업, 장시간 노동, 더 많은 비정규직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세월호'인 공장에서 '오늘도 살자' 하며 일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산재가 늘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만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12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고, 얼마 전에 또다시 한 명이 숨졌다.

넷째, 조선노연은 이번 집회의 주요 요구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통해 노동자 몫을 줄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조선소 자본가

들도 마찬가지다.

조선소 자본가들의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발맞춰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를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해 과장급 이상 사무직에 도입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조선 노동자들도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이번 집회의 요구들은 모두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조선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조선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조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조선 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18년 만에 파업(부분파업)을 했다. 삼성중공업에서도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했다.

이런 투쟁들을 더욱 키우고 확대하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프랑스와 미국 노동자들은 강력한 파업을 벌여서 상당한 성과를 쟁취했다.

투쟁을 더욱 강화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 중요하다. 조선업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파업한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 되면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의 고용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현대미포조선에서는 하청업체 KTK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조는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를 “배후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투쟁을 휘방 놓고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단

결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배신적인 행위이다.

반면 다른 그림도 있다. 올해 초 현대중공업에서는 일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해고에 맞서 정규직 활동가들이 함께 싸웠다. 정규직 노조가 동석한 원청 사측과의 면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중역인 전무가 나왔다. 결국 해고를 철회시키고 승리했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지회가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 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공장 안팎에서 홍보전을 했고 노조 간부들과 대의원들이 현장에서 노조 가입을 설득하고 다녔다. 5월 14일에는 수천 명이 모여 원하청 공동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 결과, 사내하청지회 가입이 늘었고 원하청 연대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야비한 이간질에 맞선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또 현대중공업 사례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조직화와 연대 투쟁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조선소 노조들도 이런 사례로부터 배운다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의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노연의 공동 투쟁이 이런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면, 전체 조선노동자 투쟁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함께 참가합시다!

총고용 보장! 중대재해 근절!
중형조선소 회생!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및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일시 : 5월 30일(토) 오후 2시
장소 : 경남 거제 옥포 조각공원
주최 : 조선업종노조연대, 금속노조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건설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장우성

대구 지역의 형틀목수, 철근공 등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 지역 건설 현장 대부분이 멈췄다. 대구경북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2013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협은 2015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바꿨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삶이 인간 이하의 조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런데도 건설 회사들은 건설 노동자들이 상시고용이 아니라거나,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

그동안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은 전국의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이정표가 돼 왔다. 5월 20일 파업 출정식에서 석현수 부산울산경남 건설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구 조합원들이 만들어 온 투쟁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었다. 올해 임단협 투쟁, 반드시 승

리해서 새로운 희망과 이정표를 제시해 달라. 함께 투쟁하겠다.”

부산의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올 초부터 대구의 각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몸소 배웠다. 덕분에 얼마 전 15개 업체와 맺은 임단협에서 대구 건설 현장의 기준을 내걸고 싸워 승리했다. 대구에서 10년 동안 이론 성과를 1년 만에 쟁취한 것이다. 조직도 급속히 확대됐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우리 투쟁이 다른 지역에 힘이 된다니 뿌듯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고 말했다.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단결해 투쟁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 이 때문에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구 집회를 빌미로 건설노조 김재환 동지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5월 20일 지역 결의대회에도 가장 많은 대열을 이루며 선두에서 탄압에 항의했다.

또 6월에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교육을 해서 조합원들이 더 많이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이 함께 개선되는 것이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이 쌓아온 성과를 지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노조는 올 초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많은 노조, 민중·사회 단체들이 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투쟁본부가 차려진 국제보상공원에 지지 현수막을 걸었다.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는 파업에 연대해 대구 지역 건설 현장에 자재 운반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길우 대구경북 건설지부장은 “앞으로도 매년 투쟁으로 하나씩 쟁취하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건설 현장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죽음으로 노동 탄압에 항거한 양우권 열사 포스코와 박지만은 사죄하고 노동 탄압 중단하라

5월 10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이 지테크 분회장이 노동 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우권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포스코와 열사가 일했던 사내하청 업체 이지테크다. 이지테크는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이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계열사다.

2006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이지테크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온갖 악랄한 탄압을 자행했다. 계속된 탄압으로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했지만 열사는 끝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무릎 꿇기를 거부한 열사에게 사측은 모멸감을 주며 야비한 탄압을 가했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후에도 사측은 그를 동료들이 있는 현장으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제철소 밖 사무실에 홀로 앉혀 두고는 1년간 업무도 주지 않고 집단 따돌림을 시켰다. 아파도 조퇴를 못 하게 했고 그가 119를 불러 병원에 가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정적을 통보했다. 이런 현실을 고발하려고 사무실과 자신의 책상을 사진으로 찍자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감봉 징계했다.

열사가 남긴 유서와 일기에는 그가 당한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1백30일째 멍청하게 앉아 있다. 아무도 말을 걸어 주지 않고 업무 지시도 내리지 않는다. 나와는 인조조차 하지 않는다. 책상에 업무용 컴퓨터가 있지만 인터넷 등은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

“우×× 노무팀장이 찾아왔다. 노동조합 탈퇴서를 써 줄 것을 독촉했다. 탈퇴서를 써 주면 오늘 있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노동조합을 배신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런 극악한 탄압 뒤에는 원청 포스코의 노동 탄압 정책이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속에 만들어진 민주노조를 당시 회장이던 박태준이 도끼와 낫으로 무장한 구사대를 동원해 와해시켰다. 그 후 원청은 물론이고 사내하청과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마다 어김없이 탄압했다.

민주노조 설립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화유, 협박, 해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폭력도 노동자들의 저항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저항을 이어간 것이다.

그간 포스코는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를 늘려 왔는데, 노동부 공시로도 그 수가 1만 5천7백23명에 이른다. 원청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른 노동자들을 자극할까 봐 온갖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열사는 마지막까지 동지들의 승리를 염원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양동운 지회장을 위시하여 톨몰 문체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서 하늘에서 연대하겠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전면 파업을 하고 노동 탄압 중단, 열사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무기한 상경 투쟁을 시작했다. 권력 핵심부와 연결돼 있는 거대 기업 포스코와 이지테크에 맞서려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적극적 연대가 필요하다.

조명지



금요일엔 돌아오렴

4·16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가록단 | 창비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생각의 길

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 미지북스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박상은 | 사회운동

팽목항에 부는 바람

인문학협동조합 | 현실문화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한울아카데미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들 서평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 성찰을 촉구하다

김문성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알았나요? 애 키우고 맞벌이하고 내 가정만 챙기면 될 줄 알았지. 나라에 해경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살았지.”

“TV 자막이 떴어요. ‘전원 구조.’ 그때 부모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란데, 배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배가 일본에서 가져 온 낡은 배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런 나라인 줄 정말 몰랐거든요. ... 배를 가라앉혀 놓고는 애들을 건져왔어요. 이 더러운 나라, 이 더러운 나라...”

《금요일엔 돌아오렴》(416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가록단, 창비)에 실린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유가족의 피눈물 나는 말들이다. 4·16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가록단 소속 필자 열두 명은 유가족들을 심층 인터뷰해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활동과 심경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씻기 힘든 분노가 있다. 기업들의 책임과 부패 유착은 물론이고 정부의 구조 실패, 거저 언론플레이, 진상 규명 방해가 점차 밝혀지면서 이 내려놓을 수 없는 분노는 수백만 대중에게 확산돼 왔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찬성하는 서명에 6백만여 명이 참여한 것은 단순히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권당이 일년 동안 흑색 선전을 펼쳤는데도 올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투쟁 때 여전히 여론 다수가 유가족의 요구를 지지했다. 올해는 더 많은 10~20대의 학생, 청년들이 거리 시위에 나와 폴리스라인에 맞섰다. ‘세월호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런 연대의 한복판에는 예방적인 안전 조치에서는 물론이고 구조에서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노동계급 사람들 사이의 본능적 연대의식이 있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보면 작가들이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닐 텐데도 평범한 노동계급의 애환과 비애가 가득하다.

맞벌이를 하느라 (희생된) 애들을 평소애 잘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별이 돼 버린 아이들.’

챙겨주지 못한 일, 갖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사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런데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밝게 살았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수학여행 가기 전에 신발 하나 사달라는 거 사줄 걸. 가방만 하나 사줬더니 ‘엄마, 가방이 너무 비싸네? 신발은 갔다 와서 살게’ 하는 아들한테 ‘그래, 새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발 아플 거야’ 그러면서 신발도 안 사주고 보낸 이 어리석고 답답한 엄마.”

못 믿을 기성 언론

달리 가진 것이 없어 자식이 유일한 ‘재산’이고 삶의 목적인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현재의 일상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상까지 파괴된 사건이었다.

“출근하기가 싫어요. 회사에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영이 학원비라도 보태려고 엄마도 회사를 나갔던 것이고, 나도 애들 위해서 노력했던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목표의식이 사라졌어요.”

참사 당일, 언론은 ‘전원구조’ 오보만 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순전한 엉터리로 대응하는 데도 언론은 헬기 수습 대, 함정 수백 대, 잠수인력 수십 명이 동시에 투입돼 있다고 버젓이 보도했다. 언론의 오보에 팽목항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이 격분한 것은 당연하다.

“[당일] 저녁 7시쯤에 몇몇 부모들이 돈을 건어서 어선을 빌렸어요. ... 애 아빠가 다녀와서는 ‘구조를 전혀 안 해, 보트 같은 것만 주변을 돌고 있어.’”

“배에는 양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유리창을 깨면 그 방 아이들은 다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 (참사 당일 구조에 나섰던) 선주들이 나를 보자마자 하는 첫마디가 ‘해경 개새끼, 죽일 놈의 새끼들, 저 새끼들이 안 구했어’였어요. 나보다 성이 더 나갔고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다고’ ... 선원들 중에는 학생들이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어내고 얼굴을 유리에 대고 숨을 거뒀다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400일 문화제 검찰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급변침'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봐야 한다. 이 정부는 직접적 원인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진상 규명 요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 살펴보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물음은 “왜?”로 압축된다. ‘왜 이런 사고가 나게 됐지?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왜 정부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이것들이 응축돼서 ‘이게 나라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야?’라고 표현됐다. 이중 소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의구심을 확대하고 있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각의 길), 《세월호를 기록하다》(오준호, 미지북스), 《대형 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박상은, 사회운동) 등은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가’에 대해 답변해 보려는 진지한 시도

다. 세 권 모두 읽어볼 만한 책이다.

《민변의 기록》은 민변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려 유가족을 지원하면서 파악한 것들을 나름의 틀로 종합 분석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이 참사의 핵심으로 지적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정부의 무능이다.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 같은 중요한 공공 업무까지 민영화하는 등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성을 해체해 온 것이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힌 ‘급변침’이 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지적은 침몰의 직접적 원인도 진상

규명 대상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세월호 인양이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진상 규명에도 중요한 이유다.

《세월호를 기록하다》는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과정과 기록들을 재구성해 참사 진실에 다가가려 한 수작이다. 작가기록단 소속이기도 한 오준호 작가는 재판 기록으로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행위만 기소하고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명분으로 … 사고

가 일어날 전반적 조건을 숙성시켜 온 이 모든 행위들은 세월호 재판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결국 그의 결론은 “세월호 사고를 낳은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긴 바로 그 국가, 그 사회 시스템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시스템 내 구성원들의 무책임과 비겁함은 “평범한 개인들도 자신의 행동으로 구조적 부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활동가가 쓴 《대형사고는 왜 반복되는가》도 기업의 이윤 추구와 그것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조치들이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의 장점은 제목처럼 풍부한

국내, 해외의 대형사고 사례를 통해 대형 참사가 자본주의의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 주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이 책들이 내놓은 대안들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 규제 강화, 민영화 중단과 원상 회복,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살인법 등이 모자라서 아니다. 이미 국가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이런저런 조치들을 실행한 것이 문제가 된 터다. 왜 지금껏 국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헌신해 왔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 것이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안전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가 특정 정권만의 문제일까? 세월호 참사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려는 학자들의 논문집인 《팽목향에 부는 바람》(인문학협동조합, 현실문화)에서 김동춘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해경이 사기업인 언딘에게 구조를 위탁한 것은 정부의 기능 축소와 민간 위탁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결과이므로 구조적으로 이 사고는 국가 시스템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 해군의 통영함이 출항하지 못한 것은 해군 비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경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도 오래된 판료사회의 문제점이 누적된 것이므로 단순히 박근혜 정권 차원을떠난 국가 차원의 문제다. 그렇게 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이런 분석을 “한국 시스템의 한 결과”로 스스로 제한한다. 이는 한국 지배계급의 통치 특성을 “전정 정치”로 규정하는 그의 분석이 자본주의 국가 일반과 한국 국가를 예리하게 구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절반의(또는 반의반의) 인민주권’, ‘안보 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연속성’은 최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

편(자본주의 국가 일반)과 특수(한국 국가)는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다. 특수는 보편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형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찰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출간된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울아카데미)에는 대형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다음처럼 분석하는 구절이 있다.

“시스템을 닫힌 체계로 인식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을 그냥 둔 상태에서 … 시스템을 지탱하는 암묵적 가정은 의문시하지 않고 시스템의 목표나 가치 그리고 전략을 그대로 둔 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추가하게 된다.”

이 책을 쓴 연구자들은 사회의 우선순위를 공공성에 뒀야 한다고 옹계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이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정에 도전하진 않는다. 앞의 책들처럼 이들이 지적하는 요인들, 즉 기업의 이윤 추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의 생래적 특징인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구자들의 지적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물어야 한다. 왜 기업들의 이윤 추구가 이 사회와 국가운영의 우선순위가 됐는지 말이다. 사회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기다리던 국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순위는 정치, 민주주의, 계급(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다. 따라서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앞서 다룬 온건한 두 책이 회피하는 것과 달리)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특히,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필요하다.** 세상을 통찰하려면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도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는 둘 모두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대에 한국 자본주의를 위기와 저항 모두에서 구출하려고 등장한 강성 우익 정부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적’처럼 여기는 정부가 이윤 우선주의를 문제 삼는 유가족을 적대시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한 유가족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자기 아들 시신이 나왔다는 방송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체육관 인파에 섞여서 몰래 감시하던 사복경찰이 방송을 듣고 당시 아들 나왔다고 알려주기 전까지! 참사 당일 진도 현장에 배치된 해경의 5분의 4가 유가족 감시에 배치됐다(《금요일엔 돌아오렴》).

국가의 첫째 임무는 합법으로 폭력을 독점하고서 자본가 계급을 대표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성공해 자본주의 경제가 성공하는

것이 그것에 기초한 국가가 부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예방하고 체제 내로 포섭하려고 통치의 절차상의 정당성을 위해 애쓰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다수 대중을 분열시키고 현혹시키는 일들을 매일매일 꾸며 낸다. 사람들은 오직 저항할 때나 격변적 경험 속에서 이를 문득 깨닫게 된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가족들을 몰아붙일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국민도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왔을 때는 거의 경악 수준이었어요. 엄마들이 새벽같이 올라가서 대통령 눈길 한번 사로잡으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그게 사람인지요. … 대통령이 그러니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금요일엔 돌아오렴》)

유가족을 외면한 박근혜의 눈길과, 국가를 믿고 구조만 기다리던 무고한 목숨들을 가차없이 외면한 이 사회 시스템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의 뿌리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착취받는 노동으로 이윤을 만들어 내는 노동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주도적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박노자 교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가?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김영익

북한 문제는 남한 좌파들이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북한 내부의 중요 사건이나 북·미 또는 남북 관계가 남한 노동계급의 투쟁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한 우파들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장성택 처형 사실이나 현영철 처형설 등이 불거지면, 별폐처럼 들고 일어나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사회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회인지, 서방 자본주의에 견줘 얼마나 후진적인 사회인지 선전하러 애쓴다.

이를 통해 또한 그들은 북한을 상대로 벌이는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감정적 거짓 선동과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킨다.

우파들의 ‘사회주의’ 북한 폭로는 다른 노림수도 있다. 바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대안은 없다는 체념을 퍼뜨리려는 것이다. 우파와 지배자들은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들먹이며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급진적 요구와 운동이 무망한 일이라고 시사한다.

이렇게 북한을 둘러싼 문제는 대안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옛 소련과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남한 좌파들이 옛 소련과 북한 사회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현실 사회주의”

그런 점에서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최근에 옛 소련과 북한 사회의 성격에 관해 내놓는 주장은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노동당 당원이자 불교 아나키스트이기도 한 박노자는 한국의 많은 좌파적 개인들과 서클들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간된 최근작 《비굴의 시대》(한겨레출판)에서 박노자는 “스탈린주의의 잔혹한 면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옛 소련 같은 “현실 사회주의”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관된 주장을 더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 만큼 그들은 노동에서 소외되는 것도 훨씬 덜 느꼈다. … [노동자들이] 적어도 자본가의 사적 소유에서는 해방된 것이었다.”(341쪽)

“[관료 집단] 경제적 특권이나 정치적 권력은 세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래도 기본적 사회 정의는 관철시켰다. … 또한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국가 운영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345~346쪽)

북한에 대한 태도도 비슷하다. 박노자는 오늘날 북한이 “아주 경직되고 훨씬 유교적이며 군사화된 사회”로 변질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쓰러뜨린 스탈린 동상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은 노동자들의 거듭된 저항 끝에 붕괴했다.

됐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1960년대 초반 주체사상이 선포되기 전의 북한은 “동유럽형 현실 사회주의의 한 갈래에 속했다”고 옹호한다.

그래서 박노자는 옛 소련과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보는 ‘노동자연대’의 관점에 부정적이다. (사실 박노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뭇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심지어 여처구니없게도, ‘노동자연대’의 관점이 미국의 막스 샤흐트만(‘샹트먼’이 올바른 발음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다) 처럼 미국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논리를 내포하는 듯 암시한다. 막스 샤흐트만은 1940년대 초 당시 소련을 ‘관료 집산제’라고 규정하고 서방 자본주의의 보다 후진적이라고 암암리에 여겨, 베트남전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암암리에 지지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사람이다.

박노자의 이런 주장들을 보면, 그는 옛 소련이 비록 스탈린주의로 왜곡됐어도 본질적으로 서방보다 진보적인 탈(Post-)자본주의 사회였다고 보는 듯하다.

우선, 현재 박노자의 주장을 역사를 통해 검증해 보겠다.

먼저, 옛 소련 노동계급의 지위가 서방 노동계급보다 비교적 높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옛 소련의 노동자들도 소외와 위로부터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생산수단과 생산과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은 관료가 지배하는 국유 기업에 고용돼야만 했다. 1인 경영제, 노조 무력화, 파업권 부정, 단체협약 폐지, 스탈리노프식 노동강도 높이기 등도 서방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들이다.

소비재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와 소비재 생산은 철저히 억제됐다. 예컨대 소련의 1988년 국민총생산에서 공중보건의 차지한 몫은 126개국 가운데 겨우 70위권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서방 노동자와 소련 노동자는(구매력 수준이 높지 않아) 원하는 소비재를 충분히 구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같았다. 서방 노동자들은 질 좋은 소비재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입하지 못했다면, 소련 노동자들은 소비재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구입하지 못했다는(현상적)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박노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없었다는 점을 소련이 ‘현실 사회주의’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소유관계와 생산관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소유관계는 생산관계의 “법률적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초의 계급사회 형태인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든, 중세 서유럽 가톨릭 교회든, 근대 이전 아랍 국가봉건제든 그 지배자들은 사적 소유가 아니라 집단적·관료적 소유 형식으로 생산수단을 지배했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한 이후 국가는 언제나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일부였는데다, 국가 주도 경제가 20세기 중엽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흐름이어서 서방의 많은 주요 산업체들도 국가 소유로 운영됐다. 이런 자본주의적 공기업들은 오늘날에도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한 시장 지향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서, 적대국들과 군사적 경쟁을 벌이며 생존해야 한다는 압력이 소련의 경제 ‘계획’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급속한 중공업 건설이 필요했고, 서방의 무기·중공업 생산자들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줄인 만큼 소련도 이를 가차없이 따라잡아야 했다.

일찍이 1920년대 말에 스탈린주의 관료들은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 혁명의 잔재들을 모두 없애는 반혁명을 자행했다. 국가를 통해 축적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스탈린주의 관료들은 서방의 자본가 계급이 하는 구실을 수행했다. 이처럼 옛 소련은 자본주의

스탈린주의 관료가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구실을 했다고 믿는다면,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하기도 어려워진다.

의 한 변형태인 관료적(전면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고, 본질적으로는 서방 자본주의와 다를 게 없는 사회였다.

만약 옛 소련이 조금이라도 ‘사회주의적’이었고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였다면, 1990년 9~12월과 1991년 8~9월 각각 동유럽과 소련의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체제의 붕괴를 막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또한, 소련 붕괴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반동적 회귀였다면, 그 과정에서 사회 지도 세력이 급격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옛 소련의 관료들은 대부분 소련 붕괴 후에도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보전했다. 획일적인 고급 공무원 복장이 아르마니 양복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물론 특권 집단의 명칭도 ‘노멘클라투라’에서 ‘올리가르히’로 바뀌었지만 말이다. 이것만 봐도, 옛 소련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와는 조금도 닮지 않은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무니(외형)조차 서방 사회와 흡사한 면이 훨씬 많다는 점이 아나톨리 리바코프나 보리스 옐랴프 등등의 작품을 통해 1990년대에 폭넓게 들춰내졌다.

북한

북한도 옛 소련과 마찬가지로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동유럽처럼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투쟁이 아니라 소련의 군대에 의해 건설된 사회다.

북한처럼 제2차세계대전 후 독립한 후발 국가들은 선진 경제를 따라잡으려고 국가가 자본 축적 과정을 주도하곤 했다.

북한 관료를 자본 축적에 열을 올리게 한 동력은 남한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 논리였다. 그 논리는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경쟁으로 말미암은 ‘축적을 위한 축적’이었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노동계급을 경쟁적 축적 시스템에 종속시키고 착취율을 높이려 애써 왔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하고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마땅치 않은 중간 규모 국가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다 보니, 여러 문제들에 봉착하게 됐다. 세계 자본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의 압력 때문에 북한 관료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심각한 대내외적 문제들에



알렉세이 스타하노프 스탈린은 높은 성과를 낸 광원 노동자 스타하노프를 앞세워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 운동을 벌였다. 이 때문에 소련 노동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가중됐다.

부딪힐 때마다 북한 관료들은 ‘비정상적’ 해법(주체사상, 수령 개인 숭배, 권력 세습 등)에 이끌렸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이 “아주 경직되고 훨씬 유교적이며 군사화된 사회”가 된 이유는 북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과 세계 자본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의 압력에서 찾아야 한다.

옛 소련과 북한을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는 데는 그 사회들을 비판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정치적 함의도 있다. 국가자본주의론은 박노자의 오해와 달리 옛 소련과 서방 체제의 경제적 동학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포착해,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양대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하며 노동계급 자력해방(이하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의 정신을 옹호하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앞서 삽입구로서 언급했듯이, 과거에 박노자는 다른 주장을 했다. 예컨대 2009년 출판된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소련의] 국유화한 공장과 은행들을 스탈린의 ‘노멘클라투라(특권적 관료)’가 그 집단의 사유재산인 양 관리하게 됐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노예’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한겨레출판, 78쪽)

그보다 앞선 2006년 박노자는 소련과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렀다. “[김일성 일파가] 지배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던 데에는 **소련, 즉 새로운 형태의 국가자본주의**인 제국주의 세력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북한이라는 국민국가, 국가자본주의적인 국민국가**를 만드는 데서 ‘주체’에 대한 모든 데마고기와 무관하게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격주간 <다함께> 71호, 강조는 나의 것)

그러다가 2012년에는 “사회주의”는 아니더라도 비자본주의 사회”라고 했다가(〈레디앙> 칼럼), 이제는 “현실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회 성격에 대한 규정 문제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보여 준 정치경제(학) 비판의 엄밀한 방법론과 개념에 근거할 일이지, 그저 그때그때의 인상을 따를 일 은 아니다.

일부 국제 좌파들처럼, 박노자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 노동계급의 투쟁 수준이 낮은 것에 실망하며 조급함을 느끼는 듯하다. 여기에 제국주의의 간섭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는 듯하다. 2013년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노자는 “[수령 체제를 두둔하지는 않겠지만] 김정은이 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면 시리아나 리비아처럼 미국 등 외세의 개입으로 “군운할거와 지속적 살육의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가능성(즉, 노동계급의 혁명과 권력 장악)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했다.

이런 생각들이, 과거부터 존재했고 얼핏 현실적으로 가능한 듯해 보이는 스탈린주의 프로젝트에 그가 좀 더 호감을 갖도록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제

국주의와 대립하는 제3세계 좌파 민중주의 정권이나 그리스 공산당에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을 것이다. 박노자는 과거 베트남·중국 같은 주변부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스탈린주의가 안성맞춤이었다면서, “지금도 스탈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수많은 주변부 세력과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소통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비굴의 시대》, 324쪽)

그러나 그 ‘안성맞춤’이라던 스탈린주의가 왜 그 스스로 스탈린주의(일국사회주의론이 핵심이다)를 버리고 시장지향적 체제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박노자의 설명은 없다. 게다가 이런 논리를 일관되게 밀어붙이면, 일단의 ‘진보적인’ 국가들이 있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평형추’로서 그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진영 논리로 연결된다. 그러면 시리아 아사드 정권처럼 전혀 반제국주의적이지도 좌파적이지도 않은 세력도 옹호하게 된다. 박노자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마지막으로 남은 중동의 좌파민중주의 계통의 정권”으로 본다. ‘이슬람국가’(IS) 분쇄를 위해 아사드 정권이 미국의 시리아 내 IS 공습을 묵인하는 게 민족주의적인가? 그 정권의 대량학살 만행이 좌파적이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스탈린주의 관료가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구실을 했다고 믿는다면,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하기도 어려워진다. 당연히 노동계급 투쟁에 꾸준히 인내심 있게 관여해 진정한 사회주의 정치로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조직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스탈린주의 관료가 지배했던 옛 소련을 ‘사회주의’로 보면,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고(열도당토 않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사회 성격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점은 꽤 큰 약점을 드러낼 것이다.

박노자가 10대 후반까지 옛 소련에서 살았다는 것이 그가 그 사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때 한국에서 태어나 군사독재의 종식을 목도한 사람이 다 한국 사회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다. 마르크스는 러시아어를 몰랐고 러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어도 제1인터내셔널 러시아 지부를 맡았고, 동시대의 기라성 같은 러시아 포퓰리스트(나로드니키)보다 러시아 사회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움베르토 멜로피Umberto Melotti의 Marx and The Third World[Macmillan, 1977]를 보라.)

박노자는 고대 한반도 남단의 가야 국가를 연구하는 등 거의 모든 한국인보다 한국 역사를 잘 알고, 다른 많은 문제들에도 해박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그에게서 무수히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론과 개념은 역사유물론의 그것이 아니고, 그의 정치 전략과 전술은 아나키즘의 도덕주의이지 혁명적 사회주의의 전략·전술이 아니다. 박노자가 이런 문제들에선 조금 겸손했으면 좋겠다.

독자 편지에 대한 답변



성 구매는 성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나타내지만, 성 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처벌 강화 논리로 이어지기 쉽다. 2004년 10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을 단속 중인 경찰.

〈뉴스이웃〉 윤미현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진희

146호에 실린 내 기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 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이 독자 편지로 들어왔다[웹사이트 참조,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박연오)]. 독자 편지에서 박연오 씨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성 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성 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성 노동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셋째,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답한다.

성매매는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와 인간의 소외를 나타내므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광범한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들의 욕망이나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산물, 즉 경제적 착취와 불평등, 소외의 복합적 산물이다. 따라서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들을 무시한 채 성 판매자나 성 구매자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은커녕 성매매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지배자들의 위선을 은폐하고 지배계급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성매매에 관한 지배계급의 전통적 태도는 성매매를 성 판매 여성들의 도덕적 타락 문제로 취급하며 성 판매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이런 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에서 여성주의 이데올로기를 일부 흡수해 성 매매 문제를 성 구매 남성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효과로 성 구매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강화되고 있다.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성이 열악한 처지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고, 성 구매에 비판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분명 성 구매는 성이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 구매자들의 악영향은 성산업에서 이득을 취하는 업주나 알선업자와 대등하게 취급될 수 없고, 성 구매자들 중 진정한 권력자는 극소수다. 대규모 빈곤과 여성의 저임금을 만들고, 육아 부담을 개별 가정에 전가하며, 왜곡된 성 의식을 확산하는 핵심 주체는 경제·정치 권력을 장악한 집단들이다.

낙인

성 구매자들을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으면 성매매의 구조적 요인을 가리고 성 구매자들을 형사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강화하기 쉽다. 그리고 성 구매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도덕적 비난 강화는 성매매를 감소시키지도 못했고 종종 성 판매자들의 조건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성매매 자체는 비범죄화하고 성 판매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복지 혜택, 교육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성 노동권 옹호와는 다소 다르다. 성 노동권 주장은 흔히 성매매를 여느 직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성매매는 여느 일자리에 견줘 신체

적·심리적 건강에 끼치는 위험도가 훨씬 더 높은 일이다(물론 성 판매자들의 처지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성 노동권론자들 주장처럼 성 판매자들에 대한 낙인은 사라져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성매매를 좋은 일자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매매가 성과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왜곡하며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산업을 합법화해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에서도 성 판매자들에 대한 낙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가 성산업을 관리하는 모델에서는 성 판매자 등록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성 판매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강화를 뜻하기도 한다. 성매매를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일시적인 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매춘부’로 평생 기록될까 두려워하는 여성들은 등록을 거부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성 판매자에 대한 낙인은 노동계급과 민중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간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할 때만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편, 현재 여성주의자들은 대체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에 찬성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지닌 것은 아니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 구매자 처벌을 강화하는 스웨덴 모델을 옹호하고, 또 상당수 여성주의자들은 성 노동권 옹호라는 시각에서 비범죄화와 합법화를 찬성하기도 한다. 성매매 비범죄화에 찬성하지만 성 노동권 주장에는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여성주의자들이 많지 않아서 현재 여성주의자들 다수가 성매매방지법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여성 인권 신장에 거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전 법률보다 알선업자 처벌이 강화됐고 성매매 여성이 ‘윤락녀’가 아니라 ‘피해자’로 인정됐고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했다는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여성들이 매우 제한적(폭력이나 강요가 입증돼야 한다)이라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2013년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그 점을 보완해 모든 성판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담았는데 다수 NGO 여성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여성단체들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을 환영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던 입장과 비교해 보면, 모든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주장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현재 성매매처벌법상의 성 구매자와 알선업자 처벌은 남인순 의원안에서 더 강화된다).

이런 태도는 여전히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 빈곤과 저질 여성 일자리 양산의 주범인 국가에 성매매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목표 성취가 무망할 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사회 통제에 이용돼 억압 강화에 뜻하지 않게 일조할 수 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진상규명될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 4백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구조 방기, 특별법 누더기 통과, 최근 경찰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살포 등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참사 1주기 즈음해서 최루액 대포나 차벽, 행진과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 한 단계 변했어요. 이제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주기 때 워낙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과연 경찰이 저렇게 막을 만큼 우리가 잘못된 게 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루액 대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고, CCTV로 집회현장을 감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어요. 앞으로도 부당한 공권력을 경험하면 유가족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정치적인 문제라는 식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진실 규명 운동을 정치적 투쟁에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이 점에서 아주 떼뻑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짜 놓은 프레임에 저희를 억지로 끼워 넣고 비난하고 있죠.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희 요구들은 도덕적·상식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무마시키려면 다른 논리가 필요하겠죠.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해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글을 쓴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길 원하고 유가족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글을 썼다고 하면 '대체 이 참사의 해결과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요. 그런 비난은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4백 일 동안 유가족들이 한데 뭉쳐 싸워온 것이 투쟁에 매우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견해 차이와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을 수 없죠. 희생 학생 가족만 5백 명이고, 일반인 희생자, 생존 학생 가족, 화물 피해 기사들까지 하면 직계 가족들만 1천5백여 명이에요. 3백60가정이 넘고요.

그렇지만 그런 치열한 과정 속에서 결론을 내리면 흡족하지 않더라도 같이 협력하고, 논쟁할 때는 하고 그랬어



요.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며 지내 온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희생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부모로서 미안함이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행동해서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음지,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을지 하는 걱정을 모두 해요. 1년 동안 온갖 화유와 와해 시도가 많았음에도 단 한 명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부모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내 새끼한테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시행령이 통과되고 특조위 활동 기간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새누리당 등의 방해가 계속될 듯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저희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양심이 있다면 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 지원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말하면서 “특조위 활동은 1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매우 이율배반적인 거죠. 이에 관해 여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도 가관이고요.

인양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월호를 인

양하겠다고 공식 선언 했을 때 저희가 강조한 게 '결정은 환영하지만 실제로 인양이 돼야 우린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왜 꼬투리를 잡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 알아요. 9월이면 한다더니 며칠 전에도 또 슬쩍 11월은 돼야 인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다른 얘기를 흘리는 거죠.

최근 해경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형을 둘러싸고 비판도 많았구요.

해경 재판은 문제가 있어요. 현장 책임자가 구조에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이 막중하죠. 목포해경123정장은 법리를 떠나서 저희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살인 행위를 한 것이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사람만 처벌받으면 되나요? 그 사람은 육지로 따지면 파출소장이고 현장 기동대 수준의 책임자일 뿐이에요. 대한민국 경찰이 현장 책임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출발부터 잘못된 재판임이 분명합니다.

선원들에 대한 2심이 끝나고 상고를 한다던데, 형량이 줄어든 것은 감정적

으로는 불쾌합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의 하나로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급변침을 지적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사의 진상을 더 규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상당히 큰 힘을 부여해 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1주년을 많은 시민들과 뜨겁게 보냈는데 그 결과가 시원치 않다는 점 때문에 '열심히 해도 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여름에 특별법 하나만 두고 싸운 것과는 달리, 올해는 해야 할 일들이 단순하지 않아요.

진상 규명 싸움도 다각도로 해야 해요. 특조위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도 실어 줘야 하고, 잘못하면 비판도 하고, 필요하면 특조위와도 싸워야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동시에 특조위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대안이 필요한지도 고민이고요.

배상·보상의 입장과 방향 등에 대해서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상 규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럼에도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 점 중에 배상·보상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참사 때마다 배상·보상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무마시키고 참사 피해자들을 끌어버리는 데에 활용돼 왔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선체 인양하고 실종자들도 찾아야 해

요. 이것 역시 주체가 정부예요. 비판도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을 격려도 해야 하죠.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 전체가 다 나쁜 분들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높은 데에 있는 분들, 최종 책임자들이죠. 선체 인양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하고요.

가족들 생계 문제도 있습니다. 맞벌이하면서 겨우겨우 하는 분들은 이미 한계가 지난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영원히 갈 수는 없어서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에도 그랬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뜨겁게 연대해 주셨어요. 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이 과격한 단체라는 등, 정치 단체라는 등 뼈까진 시선도 있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만난 분들은 저희와 똑같은 엄마고 아파였어요. 저희 유가족들도 월급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였고, 비정규직도 많았죠. 이렇게 같은 부모로서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함께해 주신 것은 감사해요.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관련해] 수사 대상에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을 걸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에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같이 극복하고 위축되지 말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죠.

저희는 앞으로도 참사가 해결되고 진상이 규명되고 안전 사회가 될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할 것입니다. 늘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 (www.wspape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지윤



4월 4일~5일 안산·광화문 1박 2일 도보행진 중 딸 예은이의 사진을 바라보는 '예은 아빠' 유경근 씨.